

#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hgjeong@kiep.go.kr](mailto:hgjeong@kiep.go.kr)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kimby@snu.ac.kr](mailto:kimby@snu.ac.kr)

이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janyboy@kiep.go.kr](mailto:janyboy@kiep.go.kr)

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협력정책실  
협력정책팀 전문연구원  
[bassgu@kiep.go.kr](mailto:bassgu@kiep.go.kr)

홍이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ykhong@kiep.go.kr](mailto:ykhong@kiep.go.kr)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북한경제 및 체제의 불안정성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임에도 그 중요성이나 심각성에 비해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나 정책적 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
-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시도할 당시만 해도 북한경제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대한 국내연구진의 관심이 높았으나, 최근 10여 년 동안 이 연구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관심은 매우 낮아진 상태
  - 이러한 낮은 관심은 북한의 현재 정치체제의 경직성과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대립으로 체제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고, 동유럽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역시 20여 년이 지나 현재는 체제전환정책이라기보다는 시장경제하에서의 경제정책 이슈로 전환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북한경제의 불안정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함. 북한경제의 변화를 예측하고, 협력 가능성이 보일 때 우리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체제전환국 및 소득수준별 경제성장 요인을 추정하고 그 추정결과가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정책으로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단기·중기·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체제전환국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체제전환국과 비체제전환국의 특징을 비교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함.
  - 이론적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성장 문제를 고민함으로써 북한의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협력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남북경협 차원에서 설정해야 할 기본 방향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유도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본 연구는 체제전환국 및 소득수준별[저소득, 중소득, 고소득(OECD 회원국)]로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 이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각 소득수준별로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
  -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기본 추정방정식은 아래와 같고, 추정기법으로는 고정효과와 시스템 GMM을 이용

$$\Delta \ln g_{it} = a + \alpha \ln g_{i,t-1} + \beta' X_{it} + v_i + v_t + \epsilon_{it}^1$$

- 고정효과는 시스템 GMM을 사용할 때 흔히 범할 수 있는 도구변수 사용에서 임의성을 제거할 수 있고, 시스템 GMM은 고정효과추정법이 가진 문제점인 내생성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통제가 가능

- [표 1]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임.

- 북한이 체제이행국과 저개발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북한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중점적으로 참고할 필요

- 일반 변수 중 모든 회귀식에서 유의한 변수는 국내투자이며, 인적자본, 수출비중, 인플레이션율, 외국 인직접투자, 제도적 여건 및 인프라는 모두 세 추정식에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 인프라는 간접적으로 투자관련 변수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저개발국에서 이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저개발국의 경우 인프라가 구속적 제약조건(binding constraints)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체제이행국의 경우 저개발국과 달리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
  - 저개발국은 내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성장을 견인하는 원천이 수출일 가능성이 높고, 체제이행국은 사회주의 말기 생필품 부족현상과 체제이행 초기 가격자유화로 초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라 경제안정화를 위해 인플레이션 저감이 중요한 목표였음.

---

1)  $i$ : 국가,  $t$ : 연도,  $\ln g$ : 1인당 실질 국민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  $X$ : 전술한 투자, 인적자본, 개방, 외국인직접투자, 거시경제 여건, 제도적 요인 등,  $v_i$ :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개별국의 특성,  $v_t$ : 국가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는 시간 특성,  $\epsilon_{it}$ : 독립동일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epsilon_{kjt} \sim i.i.d.(0, \sigma_\epsilon^2)$

표 1. 경제성장 결정요인 추정 결과의 요약

추정방법	전체 대상국가		저소득국가		체제이행국가	
	고정효과	시스템 GMM	고정효과	시스템 GMM	고정효과	시스템 GMM
일반변수						
인적자본	+	+			+	
국내투자	+	+	+	+	+	+
수출비중	+		+	+		
인프라	+	+				+
인플레이션율	-				-	-
외국인직접투자				+	+	+
제도적 여건	+	+	+			
체제이행 관련 변수						
대규모 사유화						
소규모 사유화						+
기업구조조정						+
가격자유화						
무역·외환 시스템					+	+
경쟁정책						

주: \*: +, -는 각각 긍정적, 부정적으로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셀에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변수는 모든 추정식에 포함되는 반면 체제이행 관련 변수는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추정식에만 포함된다. 그리고 체제이행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체제이행변수가 각각 하나씩 포함되므로 6개의 회귀식이 존재하며 그 결과 중 적어도 두 번 이상 유의한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 전기의 1인당 GDP는 정책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자료: 보고서 [표 3-3], [표 3-4], [표 3-7], [표 4-2], [표 4-3].

### ● 체제이행 관련 변수 중 유의한 것은 소규모 사유화, 기업구조조정, 무역·외환 시스템이었음.

- 소규모와 대규모 사유화의 성장효과가 상이한데 소규모 사유화의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생산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반면, 대규모 사유화는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없이 그 자체로 성장제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
- 무역·외환 시스템 자유화는 무역증대효과, 거시경제 안정효과, 경쟁촉진효과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 ● [표 2] 및 [표 3]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결정요인이 갖는 성장효과를 계산한 것임.

-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 성장효과가 가장 높은 변수는 인프라, 제도적 여건, 인적자본, 국내투자 순이고, 저소득국가로 한정할 경우 국내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수출비중 등의 순으로 나타나나 이 요인 사이의 성장촉진효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음.

- 체제이행국의 경우 인프라, 국내투자, 소규모 사유화, 외국인직접투자, 기업구조조정, 인플레이션율, 무역·외환 시스템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 전체 대상국가 및 저소득국가 표준계수

	전체 대상국가	저소득국가
인적자본	0.9272	-
국내투자	0.2404	0.6650
수출비중	-	0.4350
인프라	3.3424	-
인플레이션율	-	-
외국인직접투자	-	0.5571
제도적 여건	2.2993	-

주: 표준계수는 각 요인이 한 표준편차만큼 개선할 때 성장에 미치는 효과로 계산되었다.

자료: 보고서 [표 3-4], [표 3-7], [표 4-3].

표 3. 체제전환국 표준계수

	(1)	(2)	(3)	(4)	(5)	(6)	평균
국내투자	0.4696	0.6804	0.8473	0.5847	0.4923	0.3886	0.5772
인플레이션율		-0.3208	-0.3208			-0.3208	-0.3208
인프라	1.1351		0.3816	0.5920	1.1092	0.5702	0.7576
외국인직접투자	0.5389					0.3756	0.4573
소규모 사유화	-	0.5323	-	-	-	-	0.5323
기업구조조정	-	-	0.4481	-	-	-	0.4481
무역·외환 시스템	-	-	-	-	0.2946	-	0.2946

주: 표준계수는 각 요인이 한 표준편차만큼 개선할 때 성장에 미치는 효과로 계산되었다.

자료: 보고서 [표 3-4], [표 3-7], [표 4-3].

### 3. 정책 제언

-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요인과 정책의 순차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우리 정부의 대북경제 협력방안을 단계별로 제시
- **(정책 순차성 판단 기준)** 정책의 순차성을 결정하기 위해 첫째, 경제성장의 근본 요인으로 제도, 둘째, 정책의 상호 보완성(complementarities)과 동학적 상승작용(dynamic reinforcement), 정책의 정치적 제약(polynomial constraints)을 고려해야 함.

● **(초기-성장기반 조성 지원)** 초기 단계는 북한이 현재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단계로 상정

- 북한정권이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이러한 시도가 북한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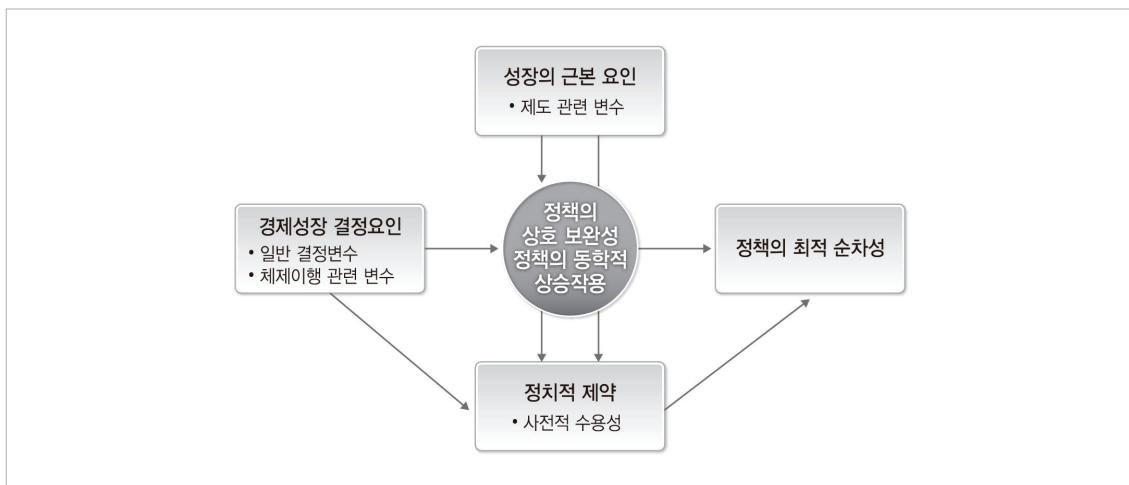
● **(중기-대외개방정책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중기에는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도모하도록 자본주의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지원하는 단계

- 최소한 비핵화 과정에 진입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소되면서 실질적인 경제개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단계로 가정

● **(후기-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후기에는 남북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할 통합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단계

- 이 단계는 이미 북한이 상당 부분 시장경제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중기에서 미루어 왔던 대규모 사유화가 추진되는 단계
- 특히 이 단계에서는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달러를 넘어서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력 양성,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이 동반되어야 하며,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단계로 가정

그림 1. 북한 경제성장정책의 최적 순차성 구상



자료: 저자 작성.

-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첫째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지원, 둘째 인도적·물질적 지원을 포함한 경제협력 지원, 셋째 대외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경제외교 지원으로 분류하여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순차적 정책변수와 연계하여 단계별로 제시
- 초기에는 성장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제3국을 통한 지식공유사업’ 추진, ‘북한경제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 자문을 시행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성장기반용 교통·물류 지원, 국제투자유치 지원을 추진함.
- 중기에는 개방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전략으로 체제이행을 위한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의무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개성공단 전·후방연관효과 제고 및 개성공단 외 경제특별구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남북·특구 연계용 인프라를 지원하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해야 함.
- 후기에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전략을 추진하여 북한의 고등교육 투자 및 운영을 지원하고, 개성공단을 첨단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지원,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을 통한 대북한 대규모 투자재원 지원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2. 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3대 협력방안

협력전략	초기			중기			후기		
	경제정책지원	성장기반 조성 지원	개방 및 수출산업 육성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경제정책지원	근본 제도 및 체제 이행 변수	정책 지원 기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국을 통한 지식공유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본 및 체제이행 제도 개선 지원 기존농 제도 개선, 소상공활동 인정 (시장기반·가격 자유화, 소규모 사유화)</li> </ul> </li> <li>• '북한경제정책협의회' 구성·정책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경제정책 경험 공유 및 협력/인플레이션 저감 및 재정정책 방향 협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대외경제연구원' 설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제이행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li> <li>- 정책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주도 (무역·외환 시스템)</li> </ul> </li> </ul>					
경제협력지원	인적 자본 지원	인적 자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 인도적 지원 (주민 영향기반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교육 및 직업훈련 재정 지원 (중등교육 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 투자 및 운영 지원 (고등교육 지원 강화)</li> </ul>				
	물질적 자본 지원	물질적 자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개성공단 국제투자 유치 지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공단 전·후방연관효과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을 통한 성장기여 지원)</li> </ul> </li> <li>• 개성 외 경제특별구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을 통한 성장기여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공단 첨단산업구조로 전환 (자입금기공 → IT 첨단산업화)</li> </ul>				
	일반 성장 변수	일반 성장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기반용 교통·물류 지원 (필수 인프라 개선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특구 연계용 인프라 지원 (기초 인프라 투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지원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원)</li> </ul>				
경제외교지원	양자 협력	양자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방 3각협력 참여 (남·북·러나진·하산 물류투자 참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인프라 연계 지원 (실크로드·이스포레스 등)</li> </ul>				
	다자 협력	다자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투자 유치 지원 (외국인투자) 개성공단 → 경제개발구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개발지원그룹' 구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신탁기금 조성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및 지원 (대북한 대규모 투자재원 지원 등)</li> </ul>			

자료: 저자 작성.